

2011년 수탁 7급 행정학

시행일 : 2011.10.08(토)

01. 왈도(D.Waldo)의 주장이나 사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에는 권위가 필요하지만 민주주의를 증진해야 한다는 진제를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 ② 신행정학은 다양한 관점을 보이지만 대체로 규범이론, 철학, 사회적 타당성, 행동주의(activism)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하였다.
- ③ 행정관리론에서 개발된 행정 원리를 토대로 행정의 처방적 기능을 강조하였다.
- ④ 가치로부터 구분된 순수한 사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사이몬(H.Simon)의 행태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답) ③

(해설)

- ① [○] 왈도는 미노부르크 회의를 주도한 신행정학을 주장한 학자로 행정에 권위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일반시민들의 요청에 대한 대응성, 책임 있는 능동성 등 민주주의적 가치를 강조하였다.
 - ② [○] 신행정학은 규범이론, 철학, 사회적 타당성, 행동주의 등 행정에 철학적 사고방식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 ③ [×] 행정관리론에서 개발된 행정원리를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적실성의 신조'와 '실천'을 통한 행정의 처방적 기능을 강조하였다.
 - ④ [○] 신행정학자인 왈도는 실증주의적 연구의 결함을 극복하려고 하였으며, 가치문제를 중시하였다.
- (참고) compass 행정학 총론 p.115

02. 니스카넨(Niskanen)의 예산극대화모형(budget-maximization model)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치가는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가정한다.
- ② 정치가는 총편익과 총비용의 차이인 순편익이 최대가 되는 수준에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려 한다고 본다.
- ③ 관료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 경제인이라고 가정한다.
- ④ 관료는 한계편익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려 한다고 본다.

(정답) ④

(해설)

- ① [○], ② [○]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모형에서 정치인은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추구하여, 총편익과 총

비용의 차이인 순편익이 최대가 되는 수준(한계편익 = 한계비용)에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한다.
③ [○], ④ [×] 관료도 자신의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며, 관료의 효용은 부처 예산의 단조증가함수로 예산극대화를 추구한다. 따라서 총비용과 총편익이 일치하는(TB = TC) 지점에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려 한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총론 p.125

03.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3종 오류를 방지하는 것이 정책문제 구조화의 핵심으로 간주된다.
- ② 주요 정책행위자들 간의 치열한 경쟁적 갈등관계는 철의삼각(iron triangle)관계라고 불리운다.
- ③ 정책문제를 정의하고 해석하는 과정은 다양한 결과에 이를 수 있는 애매하고 불투명한 과정으로 간주된다.
- ④ 정책행위자들은 실질적인 제약과 절차적인 제약 하에서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정답) ②

(해설)

- ① [○] 정책문제 구조화의 핵심은 제3종 오류를 방지하고 명확한 정책분석의 범위와 방법의 설정이다.
 - ② [×] 철의삼각 관계란 이익집단, 입법부의 상임위원회, 행정기관의 관료 등 소수 엘리트들이 연대를 형성하여 특정영역의 정책결정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3자 간 동맹이 형성되고 있는 양태를 설명하는 것으로 치열한 경쟁적 갈등관계가 아니라 참여자 간 관계의 안정성이 높은 관계이다.
 - ③ [○] 정책문제는 복잡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정책문제를 정의하고 해석하는 과정은 다양한 결과에 이를 수 있는 불투명한 과정으로 여겨진다.
 - ④ [○] 현실적인 제약 하에서 정책행위자들은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 (참고) compass 행정학 정책 p.181, 195

04. 고전적 조직이론의 기계적 조직관을 비판하고 조직 내 인간의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등장한 인간관계론의 궁극적인 목표로 옳은 것은?

- ① 조직의 성과 제고
- ② 조직 운영의 민주화
- ③ 조직 구성원의 자아실현
- ④ 조직 내부의 비공식 집단의 활성화

(정답) ①

(해설)

- ① [○], ② [x], ③ [x], ④ [x] 인간관계론이 인간적·사회적 요인을 부각시키고, 비공식적 구조에 관심을 가진 것은 사실이나, 인간의 복잡한 측면을 보지 못했고, 여전히 하향적 통제를 추구하는 관리원칙이 중시되었다. 이는 만족한 젓소가 더 많은 우유를 생산해 내듯 만족한 근로자들이 더욱 많은 생산을 한다는 식의 논리를 주장한다는 측면에서 젓소 사회학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총론 p.111

05. 정책참여자들 간의 권력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신엘리트론자인 바흐라흐(Bachrach)와 바라츠(Baratz)는 정책문제 정의와 의제설정과정
에 관한 엘리트론의 관점을 무의사결정론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나. 다원주의와 신다원주의는 집단 간 경쟁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점에서 같은 입장을 취하
고 있다.
다. 다원주의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정부의 이해관계와 영향력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
는다.
라. 하위정부모형은 공식적·비공식적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영향력 관계를 동태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④

(해설) 보기 라의 경우 하위정부모형이 정책네트워크 모형 중 하나라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가. [○] 신엘리트론자인 바흐라흐와 바라츠는 「권력의 두 얼굴」에서 엘리트론의 관점을 무의사결정론으로 설명하였다.

나. [○] 다원주의론과 신다원주의는 집단들 간의 경쟁을 중요시하였다.

다. [○] 다원주의는 정부의 능력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라. [○] 하위정부모형은 다원주의, 엘리트주의, 조합주의 모형에 대한 대안적 모형인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일종으로 정책공동체, 이슈네트워크 등과 함께 공식적·비공식적 정책과정의 동태성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정책 p.175~181

06.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 대해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② 국가에 대해 조세지출예산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세 지출보고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 대해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시행되고 있는 예산제도를 묻는 문제로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으나, 교재에 정리된 지방재정법의 주요 개정사항을 숙지한 수험생이라면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였다.

① [x] 국가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라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지방정부의 경우 그러한 규정은 없다.

② [○] 국가재정법 제27조에 따라 국가의 경우 조세지출예산서 작성은 의무화되어 있으며, 지방정부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이 의무화되었다.

③ [x] 성인지 예산·결산제도의 경우 국가 뿐 아니라 지방정부에도 도입은 되었으나, 지방정부의 경우 2013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틀린 지문이 된다.

④ [x] 국가재정법 제22조에 따라 국가의 경우 일반 예비비 규모를 일반회계 예산 총액 1/100 이내로 하도록 한도를 정하고 있으나, 지방의 경우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어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재무, 지방행정 p.555, 591, 566, 567, 601, 796

07. 공무원 개인의 가치와 태도를 토대로 공직사회 전체의 부패 정도를 설명하려는 경우에 발생되기 쉬운 오류는?

- ① 환원주의(reductionism) 오류 ② 표본추출(sampling) 오류
③ 통계적 회귀(statistical regression) 오류 ④ 생태적 오류(ecological fallacy)

(정답) ①

(해설) 이 문제는 방법론적 전체주의와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응용하여 출제된 것이다.

① [○] 환원주의란 전체는 개체의 합이라는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말하며, 환원주의의 오류란 개인의 합이 전체의 속성과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공무원 개인을 토대로 공직 전체의 부패를 설명하려고 할 때 공직사회 전체를 고려하지 못하는 환원주의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② [x] 표본추출의 오류란 방대한 자료 또는 조사자 등이 많아 표본 추출 상의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③ [x] 통계적 회귀의 오류란 피험자들이 특정 검사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얻거나 매우 낮은 점수를 얻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선발되었을 때, 다음의 측정에서는 그들의 점수가 평균을 향해 옮겨 가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x] 생태적 오류란 환원주의의 오류와는 반대되는 것으로 전체를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발생하는 오

류이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총론 p.101, 264

08. 현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법령에 의해 금지된 자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 ②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등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
- ③ 노동조합 전임자는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 ④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 지방공무원노동조합은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 ① [○]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법령에 의해 금지된 자(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교정·수사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 ② [○]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항은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
- ③ [○]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 노조 전임기간 동안 무급휴직으로 처리된다.
- ④ [×]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이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둔다.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 쪽 또는 양쪽은 지방노동위원회가 아닌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인사 p.512~514

09. 우리나라 현행 제도상 사회적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이익을 재투자하거나 그 일부를 연계기업에 배분할 수 있다.
- ②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매년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를 조사하고 육성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④ 설립 초기의 일정기간 동안에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무급근로자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 ①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 ②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제2조)
- ③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정책심의회를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제5조)
- ④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해야 한다.(제8조)

10. 조직의 이중 순환고리 학습(double-loop learn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모건(G. Morgan)의 홀로그래픽(holographic) 조직설계를 위해 개발된 ‘학습을 위한 학습 원칙’과 관련성이 높다.
- ② 학습과정의 안정성이 필요하므로 개방적인 조직보다는 폐쇄적인 조직 하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③ 학습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통찰력을 요구하지만 학습효과는 빠르고 국소적으로 나타난다.
- ④ 기존의 운영규범 및 지식체계 하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해나가는 것이다.

(정답) ①

(해설)

- ① [○], ② [×], ③ [×] 이중 순환고리 학습이란 ‘학습을 위한 학습 원칙’으로 운영 규범의 적절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이에 비해 단일순환학습(single loop learning)은 조직구성원의 행동 및 대응 양식만을 수정해 가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조직은 이중순환학습의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스스로 진화해 갈 수 있다.
- ④ [×] 단일 순환고리 학습에 대한 설명이다.

11. 공무원의 신분보장 및 퇴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신분보장은 실적주의 및 직업공무원제 정착에 기여한다.
- ② 임의퇴직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권고사직은 공무원에게 온정적 조치이지만 때로는 신분보장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
- ③ 우리나라 1급 공무원을 포함한 경력직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입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④ 직위해제의 경우는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나, 해임 및 파면의 경우는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정답) ③

(해설)

- ① [○]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신분보장은 실직주의 및 직업공무원제 정착에 기여한다.
- ② [○] 권고사직은 징계 대상 공무원에게 온정을 베푸는 수단으로 이용되지만, 엄격한 법질서의 확립을 방해하며,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 ③ [×] 국가공무원법 제68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입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과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④ [○] 직위해제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나, 해임 및 파면의 경우는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인사 p.529, 534

12. 포스트모더니티(postmodernity)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파머(D. Farmer)는 패러다임 간의 통합(paradigm integration)을 연구전략의 하나로 주장하였다.
- ② 상대적이고 다원주의적이며, 동시에 해방주의적 성격의 세계관을 지니고 있다.
- ③ 바람직한 행정서비스는 다품종소량생산체제에서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
- ④ 파머(D. Farmer)에 따르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인식적 타인(epistemic other)이 아닌 도덕적 타인(moral other)으로 인정한다.

(정답) ①

(해설)

- ① [×] 파머는 패러다임 간의 통합을 연구전략의 하나로 주장한 것이 아니라 상상, 해체, 영역해체, 타자성을 포스트 모더니티 행정이론의 핵심요소로 강조한 학자이다.
- ② [○] 포스트모더니티는 상대성과 다원성, 해방주의적 성격을 갖는다.
- ③ [○] 포스트모더니티 사회에서 바람직한 행정서비스는 획일적 대량생산이 아닌 다품종 소량생산과 상품의 수명이 짧아지는 특징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 ④ [○] 파머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인식적 객체가 아닌 도덕적 타자로 인정한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총론 p.154, 155

※ 포스트모더니티 이론의 핵심개념과 행정(D. Farmer)

상상 (imagination)	•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행정의 운영, 문제의 특수성에 대한 인정 • 새로운 사고와 판단
해체 (deconstruction)	• 언어, 몸짓, 이야기, 설화, 이론 등의 근거를 파헤쳐 보는 것 • ‘행정은 객관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 ‘행정은 능률적이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한 의문 제기과 근거를 해부(해체)
영역해체 (deterritorialization)	• 지식, 조직 등에 있어 고유영역의 타파(탈영역화를 의미) • 공공부문에서 정부의 독점적 지위해체, 탈관료제적 처방 등
타자성 (alterity)	•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인식적 객체가 아닌 도덕적 타자로 인정 • 즉자성과의 반대개념 • ‘타인’에 대한 개방성, 다양성의 선호, 기존질서에 대한 반대 등

13. 정책집행연구에 있어서 하향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요인들을 연역적으로 도출한다.
- ② 명확한 정책목표와 그 실현을 위한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을 한다.
- ③ 집행을 주도하는 집단이 없거나, 집행이 다양한 기관에 의해 주도되는 경우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 ④ 집행의 비정치적이고 기술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정답) ③

(해설)

- ① [○] 하향적 접근방법은 모든 구조적 변수를 포괄하는 거시적 접근이며, 집행에 대한 일반원칙을 도출한 후 현실에 적용하는 연역적 접근법이다.
- ② [○] 하향적 접근방법은 정책집행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채택된 정책결정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 과정으로 인식하므로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목표와 그 실현을 위한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 ③ [×] 집행을 주도하는 집단이 없거나, 집행이 다양한 기관에 의해 주도되는 경우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것은 상향적 접근방법이다.
- ④ [○] 하향적 접근방법은 정치행정이원론의 입장으로 집행의 비정치적이고 기술적인 성격을 강조한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정책 p.240~243

14. 우리나라 행정통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하여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재산등록의무자는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혼인한 자녀의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 ③ 국가의 회계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감사원의 필요적 감사사항에 해당한다.
- ④ 감사원은 회계감사의 결과에 따라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확인한다.

(정답) ②

(해설)

- ① [○] 국정감사는 국회가 예산심의 수행 전 국정 전반에 관하여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 재산등록의무자는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보유재산을 등록하고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 때 외척 또는 혼인한 자녀의 재산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 ③ [○] 국가의 회계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감사원의 필요적 감사사항에 해당한다.
- ④ [○] 감사원은 회계감사의 결과에 의하여 '국가기관'의 세입·세출 결산을 확인(감사원법 제21조)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 한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인사, 재무 p.517, p.593, 616

15.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정제도는?

- ① 국가예산의 편성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허용하는 참여예산제도
- ② 지방예산의 편성시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경우 총액규모만 반영하고 세부지출을 집행부서에 위임하는 총액계상예산제도
- ③ 국가재정지출에 있어서 낭비를 감시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납세자소송제도
- ④ 지방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일부를 기여자에게 보상으로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제도

(정답) ④

(해설)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정제도를 비교한 문제로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으나, 교재에 정리된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의 주요사항을 숙지한 수험생이라면, 접근이 용이한 문제였다.

- ①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규정되어 지방예산편성과정에 필수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국가는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이 이뤄지지 않았다.
- ② [×] 총액계상예산제도의 경우 국가는 국가재정법 제37조에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지방정부에서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
- ③ [×] 납세자 소송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위법하게 사용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소송제기권을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에서는 주민소송제를 도입하였으나,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납세자 소송(국민소송제)은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 ④ [○] 지방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일부를 기여자에게 보상으로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제도는 지방재정법 제48조의 2에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재무, 지방행정 p.555, 567, 602, 642 p.796, 797

16. 우리나라 현행 지방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소비세는 특별시·광역시·도세이며, 지방소득세는 시·군·구세이다.
- ② 최근 유사·중복 세목이 통폐합되어 현재 보통세 8개와 목적세 3개의 세목으로 간소화되었다.
- ③ 기초자치단체는 목적세를 부과할 수 없다.
- ④ 재산과세 중 거래과세로 분류되는 취득세는 특별시·광역시·도세이며, 등록면허세는 시·군·구세이다.

(정답) ③

(해설)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세제를 강의시간에 충분히 숙지하였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 ① [×] 지방소비세는 특별시·광역시·도세이지만, 지방소득세는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세이며,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세이다.
- ② [×] 보통세 9개와 목적세 2개의 세목으로 간소화되었다.
- ③ [○] 기초자치단체는 목적세인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없다.
- ④ [×] 취득세는 특별시·광역시·도세이며, 등록면허세는 자치구세이며, 도세이다.

※ 우리나라의 지방세 세목체계

구 분		특별시·광역시세		자치구세	도 세	시·군세
지방세	보통세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취득세, 레저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목적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국세	내국세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재평가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참고) compass 행정학 지방행정 p.776

17. 공무원 보수제도로써 연봉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연봉제 도입을 통하여 관료제 내부의 공동체의식이나 팀정신이 향상된다.
- ② 연봉제는 실적주의 및 직위분류제를 강화시키지만 직업공무원제 및 계급제는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 ③ 우리나라의 경우 연봉액을 1년 단위로 책정하여 전액을 매년 1회 일괄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④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연봉제 수립에 있어서 직무분석이 직무평가보다 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정답) ②

(해설)

- ① [x], ③ [x] 연봉제는 개인의 능력, 실적, 공헌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연 단위의 계약에 의해 임금액이 결정되는 능력 중시형 임금 지급 체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 단위로 책정하여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o] 연봉제는 성과중심의 보수제도이므로 직업공무원제 및 계급제는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 ④ [x]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은 직무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된다.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는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반영한 2개의 직무등급(가, 나)에 따라 보수를 책정(직무급적 요소)하고 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지급(성과급적 요소)한다. 따라서 직무분석보다는 직무평가가 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인사 p.446, 504

18.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는 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집행전략이나 집행설계를 수정·보완하는데 도움을 준다.
- ② 인과관계 추론의 조건으로 연관성(association), 시간적 선후성(time order), 비허위성(non-spuriousness)을 들 수 있다.
- ③ 메타분석(meta analysis)은 경험적 연구뿐만 아니라 이론적 연구에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④ 크리밍효과(creaming effect)는 어떤 요인이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을 모두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답) ③

(해설)

- ① [o] 형성평가는 정책이 집행과정 도중에 수행되는 평가로서 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집행전략인 집행설계를 수정·보완하는데 도움을 준다.
- ② [o] 인과관계의 설립조건으로는 시간의 선행성, 공동변화, 경쟁가설 배제(비허위적 관계)가 있다.

- ③ [x] 메타분석이란 '평가에 대한 평가'로서 계량적이고 통계적인 분석방법으로 경험적 연구 적용에 가능할 뿐 이론적 연구에는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④ [o] 크리밍 효과는 효과가 크게 나타날 사람만 의도적으로 실험집단에 배정한 경우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크리밍 효과는 인과적 추론의 정확성을 저해하는 경우 선발요소와 관련된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정책 p.258, 260, 261, 265

19. 베버(M. Weber)의 관료제에 대한 비판론자들이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관료제의 병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고른 것은?

- ㄱ. 조직구성원은 한 가지의 지식 또는 기술에 관하여 훈련받고 기존규칙을 준수하도록 길들여지기 때문에 변동된 조건 하에서는 대응이 어렵게 된다.
- ㄴ. 권한과 능력의 괴리, 상위직으로 갈수록 모호해지는 업적평가기준, 조직의 공식적 규범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압박감 등으로 조직구성원들이 불안해지므로 더욱 더 권위주의적인 행태를 가지게 된다.
- ㄷ. 상관의 계서적 권한과 부하의 전문적 권력이 이원화됨에 따라 조직 내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어 조직구성원들의 불만이 증대된다.
- ㄹ. 집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통제와 법규우선주의, 그리고 물인격적(impersonal) 역할관계는 조직구성원의 사회적 욕구충족을 저해하며 그들의 성장과 성숙을 방해한다.

① ㄱ, ㄷ

② ㄱ,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정답) ④

(해설)

- ㄱ. [o] 관료제의 병폐 중 베블린이 제시한 훈련된 무능에 대한 설명이다.
- ㄴ. [o] 권위주의적 행태의 조장은 관료제의 병폐 중 하나이다.
- ㄷ. [o] 권력구조의 이원화와 갈등에 의해 갈등을 유발시키고 조직 내 비효율을 발생시킨다.
- ㄹ. [o] 관료제는 인간적 발전을 저해시키는 문제를 야기한다.

※ 관료제의 병폐

인간적 발전의 저해	집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통제와 법규우선주의, 비개인적 역할관계는 불신과 불안감을 조성하고 조직구성원의 사회적 욕구충족을 저해하며, 성장과 성숙을 방해
목표대치	법규의 엄격한 적용과 준수의 강조로 과잉동조 현상과 목표와 수단의 대치현상이 빚어짐(목표보다는 수단인 규칙이나 절차 중시).
훈련된 무능	한 가지의 지식 또는 기술에 관하여 훈련받고, 기존규칙을 준수하도록 길들여진 경우 변동된 새로운 조건에 적응시키지 못하는 경직성을 보임.
변분욕례와 변동에 대한 저항	구조의 경직성 및 법규·절차준수의 강조, 문서주의는 변분욕례를 악화시킴. 또한 쇄신과 발전에 대해 저항적이며, 고객과 환경의 요청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관료적 행태가 발생함.
권력구조의 이원화와 갈등	상사의 계서적 권한과 부하의 전문적 능력이 이원화되어 갈등과 조직 내 비효율을 유발
권위주의적 행태의 조장	권한과 능력의 괴리, 상위직으로 갈수록 모호해지는 업적평가기준, 공식적 규범의 엄격한 준수 등이 관료의 권위주의적 행태를 조장. 공식적 권한을 개인적 권력과 이익 신장·보호에 사용
무리한 세력팽창	업무량과는 상관없이 기구와 인력을 증대시킴(관료제의 제국주의).
관료를 무능화하는 승진제도	관료제의 규모가 커지면 승진의 기회가 확대되고 무능한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됨(피터의 원리).

(참고) compass 행정학 조직 p.307

20. 행정정보화 및 정보·지식정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가. 지식관리에서는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을 명시적 지식(explicit knowledge)으로 전환시켜 조직의 지식을 증폭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나. 정보제의 속성상 그 생산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어렵다.
 다. 보편적 정보서비스정책의 준거 중에서 활용가능성이란 빈부격차 등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 우리나라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한다.
 마. 정보는 사물이나 사실을 기호로 표시한 것이고, 지식을 정보가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형태로 가공된 결과이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②

(해설)

가. [○] 지식관리에서는 암묵지를 적극적으로 형식지(명시적 지식)화하고 광범위한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며, 지식획득·전파를 활성화해야 한다.

나. [○] 정보제는 복제를 통해 무한히 재생산할 수 있으므로 그 속성상 그 생산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어렵다.

다. [×] 보편적 정보서비스 정책의 준거에는 접근성, 활용가능성, 훈련과 지원, 유의미한 목적성, 요금의 저렴성이 있다. 그 중 활용가능성이란 장비의 부적절성 혹은 개인적 장애 때문에 사람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이유 때문에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요금의 저렴성에 대한 설명이다.

라. [○] 우리나라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한다.

마. [×] 정보는 현실로부터 직접 산출되는 데이터가 처리·정제되어 체계화된 것이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정보화 사회와 행정 p.647~653, 661